

#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없었다”…입장표명

### 직무유기 직권남용·환경법 등 위반 고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

순천시는 지난 22일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고 “상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환경법 등 위반 고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순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하여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으로,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개소 453ha로 토지매입비만 약 1,600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순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은 실효

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적 책임이었다는 것”

또, “이러한 사유로 2016년 8월 순천시는 상산, 봉화산 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대상지 공모하였으며, 2016년 9월 (주)한양건설(주)의 1개사의 (상산공원(공동주택), 봉화산(방북지구) 택지개발) 제안서를 접수하여 같은해 11월에 제안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수용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안서 평가 당시 관계법령 해석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6년 당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없었고 상세한 지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생긴 착오라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결과 보고서에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사업취소,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다.”면서 “단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인데 순천시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수립과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순천시는 기부채납 업무를 개선하여 향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순천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추

진 중인 타 지자체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절차를 받은 사례가 없었고,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이견이 남아있어 향후 국토부 및 법제처 등 추가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2020년 9월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결정 무효,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감사보고서 또한 법원에 제출되어 지난 8월 1차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오는 5월 13일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순천시는 “이번 시민단체와 토지소유자의 고발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고발대상인 아니며 불구고 별도 행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을 위한 휴식과 건강, 정서함양 뿐만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을 차단하는 도시 숲으로 시민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앞으로 순천시는 사회적 합리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승호기자



‘이주노동자도 인간답게’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회원들이 25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1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서 ‘쿨쿨’…만취 운전자 입건

20대 운전자가 왕복 8차선 도로에 차를 세운 채 깊이 잠을 자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술을 마시고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주변 왕복 8차선 도로까지 약 5km가량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5%·면허 취소 수치)을 한 혐의다.

A씨는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유나기자

## 광주 모 대학, 확진자 개인정보·감염경로 유출

### 차별조장 우려…방역당국 “당사자 고소할 경우 법적조치 가능”

2021년 4월 25일 일요일

**생** [Web발신] 생활관 행정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학생이 동맥주에서 알바를 하던중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어제(4월 23일4일) 검사를 받고 오늘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구보건소에서 관 및 관에 역학조사가 10시 이후로 나올 예정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감실(062-622-1111) 연락바라며, 통제에 협조 바랍니다. MMS 오전 9:51

광주의 모 대학교가 기숙사생의 코로나19 확진이후 전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자의 개인정보와 감염경로를 노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광주의 모 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숙사생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전체 학생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1000

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생활관 행정실 명의의 문자메시지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포함돼 있었다.

학생의 출신지역과 남구의 한 호프집 감염경로, 날짜까지 표기됐다. 문자메시지는 기숙사생의 학부모에게 까지 전송됐으며 일부는 출

신지역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학교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숙사생은 “학교 측은 전수검사 전에 기숙사 밖으로 나올 경우 퇴사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 시설에 들어가 간식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검사 과정에서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숙사 학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데 확진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적시했는지 문자메시지를 보고 놀랐다”며 “학교 측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문자메시지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 등은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노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